

박안수 “비상계엄 몰랐다”…김용현, 사실상 진두지휘

국회 국방·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박, 계엄 관련 대부분 '모른다' 답해
김선호 “국방장관, 병력 투입 지시”
조지호 “포고령 1호 따라 국회 통제”

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관련 사항에 대부분 모른다고 답하며, 비상계엄은 사실상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호 국방차관과 박안수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긴급 담화 이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게 됐냐는 질문에 “계엄 선포 이후 갑작스럽게 지휘통제실로 이동하게 됐고,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이후 합동참모본부 지하 지휘통제실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는 김선호 차관은 “지통실에서 (김 전 장관이) 지휘를 하고 계셨다”고 했다.

계엄에 대해서는 “국방부 관계자가 사전에 거기에 대해 인지를 했거나 숙지한 사람은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박 총장은 ‘무늬만 계엄사령관이었고 대부분 지시는 김 전 장관이 행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지적에 “모든 것을 (김 전 장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뉴스시

관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흘러가는 과정에서 병력 움직임 등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계엄령 해제시까지 국방부 청사 지하통제실에서 병력 투입 등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총장은 “군 부대에 (병력 투입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했다. 군 헬기가 국회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다.

김 차관은 “(병력 투입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대해서도 박 총장은 본인이

견내받고 날짜만 고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포고문을 순간적으로 읽어 봤다”며 “동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어 법률 검토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김 전 장관에게) 제시했고 검토가 완료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국회 차단 논란과 관련해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포고령 제1호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계엄사령부로부터 국회를 통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처음에는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며 거부했다”며 “(계엄사에서) 포고령 내용을 확인해 달라기에 확인한 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조지호 경찰청장. 뉴스시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소집 당시 “저 역시 (계엄령 선포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행안위에 출석해 ‘가장 중요한 계엄령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은 어떤 의견을 표명했느냐’는 이혜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을 포함해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제가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 11분일 것이다. 그때 누군가 세어서 11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다. 개의 요

건은 구성원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국무위원은 이 장관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7명이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 2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채현일 의원이 ‘그날 법무부, 중기부, 산자부 장관은 왔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반수는 너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민 73.6%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반대 24%

리얼미터, 전국 504명 여론조사
‘만 18~29세’ 86.8% 가장 높아

국민의 73%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3.6%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이며, ‘잘 모름’은 2.4%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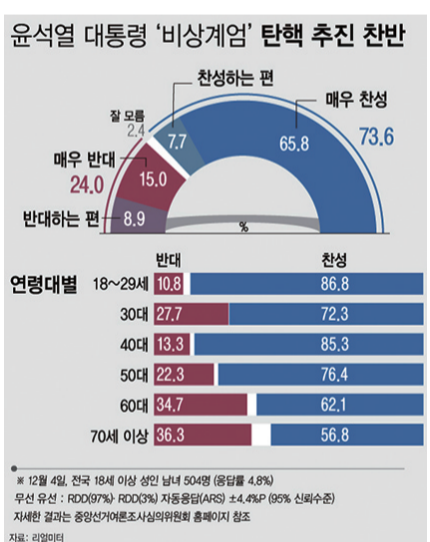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79.3%로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0%),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순이다.

연령별로는 만18~29세(86.8%), 40대(85.3%),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 순으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각각 94.6%, 71.8%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보수층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4%, 48.0%로 비슷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한 응답은 69.5%로 나타났다.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8.2%), 인천·경기(73.5%), 대구·경북(70.5%), 대전·세종·충청(64.4%), 부산·울산·경남(64.3%), 서울(62.7%) 순으로 내란죄



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85.1%), 40대(85.1%), 50대(73.2%), 30대(64.7%), 60대(56.9%), 70세 이상(48.8%) 순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각각 93.5%, 65.4%가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답했다. 보수층에서는 ‘해당한다’가 45.2%, ‘해당하지 않는다’가 49.9%로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4.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들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성현 기자

김민석 “尹, 2차 계엄 선포 가능성 100% 있다”

“비정상적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어 끌어내리지 않는 한 방어권 없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두고 “100%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 “저는 100% 그렇게 본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본질적인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궁지에 더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부터 국방·안보 라인 인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지목하며 계엄령을 준비하

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른 국방장관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은 일시적인 후퇴다. 12·12 사태 때도 마지막에는 일시 후퇴 내지는 쿠데타를 포기할 것처럼 보이는 트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막고 김건희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비상 계엄 선포의) 최대 동기로 작동한다고 봤다”며 “우크라이나를 통한 광화문을 통한 아니면 남북관계를 통한 어떤 트랙을 가동시켜서라도 반드시 계엄 명분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독재자도 시도해 보지

않은 반국가세력론을, 야당과 국회, 심지어 뉴라이트나 후쿠시마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국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반국가세력론을 자기의 무기로 장착한 비정상적인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난 잘못이 없다. 민주당 폭거를 알려려고 계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대해 “이미 대통령은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는 한 저희는 방어권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흥기가, 술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가 주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與 소장파 5인, 尹에 “대국민 사과·임기 단축 개헌 제안”

“국민들로부터 권위·신뢰 잃어”

국민의힘 소속 소장파 의원 5명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제안했다.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를 하라”며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

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다”며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장파 5인은)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데 항상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추가로 (합류)할 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원내지도부 사퇴에 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